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무용지물

소방·구급차 골든타임 확보 위해 시행했지만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안돼 협의 없이 일방 추진...주택관리협회 내용 모르고 시스템 교체비 부담 난색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가 아파트 단지나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 경찰차와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도입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자동차가 정차 없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대형 범죄나 화재신고 시 ‘골든 타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해당 단지마다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인차단기에 가로막혀 제 때 통과하지 못하는 실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만 만들었을 뿐 정작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 내 무인차단기 자동 통과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전 시행령의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 데 따라 광주·전남 경찰, 소방·구급차 693대에 전용번호판을 달았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범죄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로, 전남에서는 경찰차 395대, 구급차 122대가 998 번호판으로 교체했고 광주에서는 경찰차 147대, 구급차 27대, 생활안전차(발집계 등) 2대 등이 전용번호판을 부착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가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통과시키도록 바

꾸는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들 업무를 시설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에서는 자체 비용 부담을 들어 프로그램 개선 등에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공동주택 내 CCTV·무인차단기 설치업체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번호판을 입력하려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무인차단기 한 대당 5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 출동했다가 무인차단기에 막혀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놓고 이동하는가 하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진입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홍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번호판 관련 현수막을 보긴 했는데 우리 아파트가 자발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 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측도 “그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무인차단기 설치 공동주택, 업무용 시설, 다중이용시설 현황 파악도 전혀 못하고 있다.

광주시가 주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소방차, 경찰차 자동 통과될 수 있도록 차단기 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라는 현수막만 걸었을 뿐 적극적 계도·홍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지역 아파트 주거 비율이 66.8%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로, 1177개 단지에 43만세대가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가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는 현수막이 걸려있고(위), 해당 아파트는 아직 차단기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상태. /김민석 기자 mskim@

시설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지역 몇 개 단지에 무인차단기가 설치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략 단지마다 200만~300만원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익 신고인가... 선거 공작인가

도선관위,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김 시장 측 “공작 차원 접근 금품 요구한 것” 신고자 경찰 고발

부조리에 맞선 공익 신고인가. 경쟁후보를 읊해하기 위한 선거 공작인가.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지역사회 내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김 시장의 부인과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자에게 1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이후 김 시장 측이 곧바로 경쟁후보측 ‘공작’이라며 해당 신고자를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한쪽에서 공익신고자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공작 정치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전남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김 시장 배우자 측근을 통해 신고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물품을 전달받는 장면이 찍힌 사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김 시장측도 해당 신고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사전 기획으로 금품을 요구한 공작 정치의 주동자라는 게 김 시장 측 주장이다.

김 시장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작 차원에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뒤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한 H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H씨는 김 시장 배우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고 의도적으로 접근,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지속적인 금품 요구에 주변 지인에게 토로했다니 해당 인사가 무마차원에서 H씨에게 금품을 건넌데 받아마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품 전달 장소, 시간을 지정해 물품을 주는 장면을 사진 촬영했고 해당 장소 주변에 차량 3대가 동원돼 조직적으로 같이 움직인 정황이 있다며 경쟁후보자측의 철저한 사전기획에 의한 범죄행위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근거없이 의혹만 가지고 보도 자료를 쓰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신고자와 같이 움직인 차량 소유자, 운전자, 이들 간 통화내역을 확인하면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조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수사인 만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사에 ‘수사기관 주도 선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 2개 법안 발의

여수해양대학교 현장실습생 고(故) 홍정은(18)군 <광주일보 10월 11일 6면> 사고와 관련,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고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기능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도록 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조항도 포함시켰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은주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권익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새해 소망문구 써 드려요 10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도서관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새해 소망문구를 써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두환 형사재판 공소 기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한 전두환씨의 5·18 형사 재판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전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328조 1항 2호), ‘328조 1항 각 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363조 1항)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에 지난해 5월부터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한편,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소송 당사자 승계 등을 통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